

석 사 학 위 논 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전 공

심 수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성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Welfare Awareness
: Focused on Community Residents Council's Counselors



HANSUNG
UNIVERSITY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전 공
심 수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성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Welfare Awareness
: Focused on Community Residents Council's Counselors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심수연

심수연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심 수 연

국민의 정부 이후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강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니는 복지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이 지닌 복지의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의식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123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복지의식은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은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빈곤한 사람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지원, 고용 및 자활사업, 방과 후 교육 및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구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복지의 책임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직까지 지역복지의 책

임주체로 중앙정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지역복지실천에 있어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사회화, 자기이해, 그리고 가치관 요인에 따라 복지 대상과 복지 영역 그리고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사회화 요인인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 자기이해 요인인 자녀수 및 가구구성, 소득정도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증세를 하여야 하고,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같은 가치관 요인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 소득 및 가구구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복지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주민자치위원, 복지의식, 지역복지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의의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1. 연구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주민자치위원회	5
1.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	5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7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9
제 2 절 복지의식과 영향요인	10
1. 복지의식의 개념정의	10
2.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제 3 장 연구방법	19
제 1 절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19
제 2 절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19
1. 복지의식	19
2.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21
제 3 절 분석방법	23

제 4 장 연구결과	24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4
1. 사회화 요인	24
2. 자기이해 요인	24
3. 가치관 요인	26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복지의식	27
1. 복지대상에 대한 인식	27
2. 복지영역에 대한 인식	28
2.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29
제 3 절 영향요인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	30
1.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차이	30
2.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차이	36
3.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차이	4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49
제 1 절 결론	49
1. 결과요약	49
2. 논의	52
제 2 절 제언	53
【참고문헌】	55
【부 록】	60
ABSTRACT	66

【 표 목 차 】

<표 3- 1> 복지의식	20
<표 3- 2>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22
<표 4-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25
<표 4- 2>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분석	27
<표 4- 3> 조사대상자의 복지의식	28
<표 4- 4> 사회화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	32
<표 4- 5> 자기이해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1	33
<표 4- 6> 자기이해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2	34
<표 4- 7>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	35
<표 4- 8>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	39
<표 4- 9>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1	40
<표 4-10> 자기이해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2	41
<표 4-11> 가치관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	42
<표 4-12>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	45
<표 4-13>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1	46
<표 4-14>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2	47
<표 4-15> 가치관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	4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지방 분권화와 저비용 고효율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의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현재 전국의 3,477개의 시도에 2,68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이다(행정안전부, 2011).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추진되었다(조석주, 2004: 78). 첫째, 읍·면·동 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의 시·구청 이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강화시키시는 것이다.

둘째,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조석주, 2004: 78).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복지·문화·교육·정보화 등 생활상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좌우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써,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이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다(조석주, 2004: 80).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실현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역발전, 지역 복지의 향상,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준칙).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복지의식은 지역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구혜영(2008)이 주민자치위원 활동 중인 특성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닌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니는 복지의식이 지역복지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들의 복지의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식이 가치나 신념에 더하여 행동성향을 포괄한다고 보는 광의의 복지의식은 의식이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 즉 태도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이중섭, 2009: 75-76). 따라서 복지의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영향요인을 크게 자기이해 요인(Blekesaune & Quadagno 2003), 신념 혹은 가치로 대변되는 가치관 요인(Kulesa & Eagly, 2009), 그리고 사회화 요인(Andress & Heien, 2001)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이중섭, 2009: 7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복지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닌 복지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복지의식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복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의 복지의식이 지역복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지역복지의 증추가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닌 복지의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지닌 복지의식과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복지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실업 및 빈곤자, 다문화 가정 등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복지 영역은 환경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지원, 빈곤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 및 자활사업, 문화 여가사업, 취미 교양 교육,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등이다. 그리고 복지 책임 주체는 동 또는 구 단위의 지역복지를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국가, 시군구의 지방정부, 구 또는 동 단위 자치센터, 지역주민 중에서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졌으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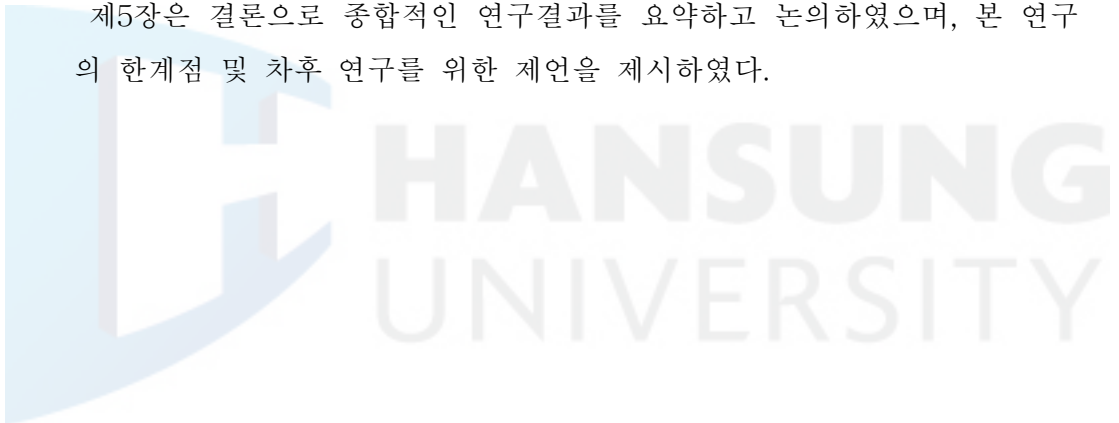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그리고 연구의 범위에 대해 밝히고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주민자치위원의 복지의식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틀을 설계하는데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사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 내용,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12.0 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주민자치위원회

1.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정부의 기능전환 정책에 의하여 각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 2011년 1월1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의 수는 2,681개이며, 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치회관이나 주민회관, 자치센터라는 이름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이러한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중복행정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행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에 생긴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시설 등을 꾸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높이려고 하였다(박희선, 2000: 47).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2: 조석주, 2004: 87-88에서 재인용)

첫째, 주민자치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민자치 행위는 지역에서 어떠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지역주민이 모여 논의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행위의 중심적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이 모여서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도모하여 상급 행정기관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하며 주민사랑방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 주차 문제, 청소, 안전 문제, 시설 설치와 관리 등 지역의 토론허장이며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거나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둘째, 문화여가 기능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취미교실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프로그램과 취미교실의 개설과 운영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와 기회가 주어져 발표회, 문화, 취미 여가선용, 등으로 동호회 및 산악회 스포츠 활동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복지 기능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실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조와 수재,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마을문고’와 ‘청소년 공부방’과 같은 시설들이 원조에 속하고, ‘건강재활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구호에 속한다.

넷째, 주민편익 기능이다. 주민편익 기능은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기능과 시장제공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제공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제공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영리기업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도·농 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중고물품 교환 장터,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 등은 지역경제생활의 활성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주민자치센터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시민교육 기능이다. 시민교육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강좌, 주민 교육 강좌 등은 전자에 속하고, 청소년 교실, 외국어 교육, 어르신 인터넷 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은 후자의 사례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주민교육의 공간으로서

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주부 등의 참여가 용이하고 대상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애학습,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 진흥기능이다. 진흥기능으로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활동으로 구현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운동을 펼치거나 재난·재해의 발생 시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복구활동을 한다. 또한 주변에 결식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을 해주거나 식사 제공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소년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조직이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조직으로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읍·면·동장의 심의 및 자문기관적 성격과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행정자치부, 2002: 조석주, 2004에서 재인용)의 제 18조 ②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결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읍·면·동 동장의 심의·자문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전환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첫째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는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셋째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넷째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다섯째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다.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실현의 장이 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형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 자원봉사자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은 봉사 조직으로서 지역 내에 내 집 앞 청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청소년 계도, 방법 순찰, 교통정리, 우리 동네 하천 생태공원 살리기, 주차질서 확립 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자치활동의 대상이 된다. 지역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을 지역주민이 토론타도록 자치의 장을 마련해 토론에서 합의된 내용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의 통로의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 협동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공동체 형성에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 봉사자 정신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한다.

둘째, 주민의 참여없는 주민자치란 있을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여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개개인의 적극적 활동과 참여 여하에 좌우된다. 자치위원회 발전 방향에 가장 기본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활발한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위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할 때 지역복지는 발전할 것이다.

셋째, 회의 진행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 확보이다. 동정자문위원회가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적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운영에 대한 읍·면·동장의 심의 및 자문기관이며, 일부 센터운영에 대해 의결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에 가기 전에 미리 사전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참석하면 당일 안건이 법이나, 조례, 규정에 합당한

지 센터의 이념이나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센터의 고유 업무인지, 시일이 충분한 현안 문제인지 아니면 당장 처리해야 할 안전인지, 각 분과별로 회의 진행시 어느 정도 예비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문의 자문도 받고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아는 분의 도움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회의 내용의 전달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7조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인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동 인구가 3만 명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28명까지 두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별도의 고문을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인구 기준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며 인구 감소 기준은 매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운영조례 제 1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급 학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시민 각계 분야의 전문가·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 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이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드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문은 동장이 위촉

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장은 반드시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 절 복지의식과 영향요인

1. 복지의식의 개념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형태, 경제적 발전정도,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사회복지제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기본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최일섭(1985)은 사회복지제도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제도의 하나이고 둘째, 사회성원의 복지를 추구하며, 셋째, 사회성원들의 복지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 넷째, 사회복지의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는 제반정책과 노력을 포함하며, 다섯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이 지닌 복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언급할 때 국민의 복지인식이 중요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 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

역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 인식이 중요하다.

복지의식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복지의식을 인식으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인식으로부터 나온 행동까지를 포함한 태도를 복지의식으로 보고 있다. 광의의 복지의식은 의식이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 성향 즉 태도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이봉화(1991)는 복지의식을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회성원들이 지니는 포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중섭, 2009: 76에서 재인용). 이중섭(2009)은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들의 가치 판단에 따른 행동 지향성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 성향까지를 복지의식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과 달리,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는 복지인식을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 체계 또는 신념 체계로 보았다.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3)은 복지의식이란 개인의 복지현실을 체험하고 자각하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일반 국민들이 국가제도를 통하여 재분배되는 복지에 대한 의식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복지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김영순과 여유진(2008)은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복지의식이란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이라고 규정하여 인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한 행동 성향으로 정의함으로써 복지태도를 광의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복지의식과 복지태도의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당수의 연구에서 복지의식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복지태도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의미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복지의식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자에 따라 넓게는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으로, 좁게는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나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정

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고 있으며, 빈곤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 및 다양한 대상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의식은 그 사회의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서구의 사회복지형성사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다(이중섭, 2009: 74.).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모(1986)는 복지의식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복지의식을 빈곤, 보건, 노인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성균(2002)과 김신영(2008)은 복지의식을 복지 책임 주체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우아영(2000)은 사회적 형평성, 복지 책임주체, 조세 부담, 복지 재정, 사회보장의 제도 운영,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복지의식을 살펴보았으며, 류진석(2004)은 국가에 의한 복지기능의 정당성, 국가의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그리고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정당성의 다섯 영역으로 복지의식을 구분하고 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의식과 복지 책임 주체를 통해 복지의식을 이해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양옥경(2002)은 복지의식을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일컫는 말로서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복지제공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련의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의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의 복지의식을 다름에 있어 복지의식을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로 본 양옥경(2002)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은 지역사회 복지 대상자에 대한 태도, 복지제공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련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영향 요인들을 어

떻게 범주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성균(2002)은 복지의식이 계급의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급 관련 변수, 즉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계급적 행위, 그리고 계급구성원의 사회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중섭(2009)은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사회화 요인,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아름(2010)은 자기이해관계 요인, 가치관 및 정치성향 요인, 프로그램 수혜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1) 사회화 요인

사회화(socialization) 요인은 ‘자기이해 요인’에서의 자기이해 과정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개인 간에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복지국가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됨을 말한다(이중섭, 2009: 78). 대표적인 사회화 요인으로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령, 성, 교육 등으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는 변인들로 구성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주로 언급되는 변인이 성이다. 성이 주로 언급되는 이유는 여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타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남성보다 더 많이 수행해옴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남성보다 더 호의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이중섭, 2009 :78).

류만희와 최영(2009)은 성별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복지국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특성상 여성들이 취업하기 용이한 일자리라는 점이 여성이 남성보다 친 복지적 성향을 갖게 한다. 둘째,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많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복지국가의 급여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의식과 복지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화 과정에서의 성별 경험의 차이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신영(2008, 2010)은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청소년의 복지의식을 조사한 두 연구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연구한 이중섭(2009)의 연구에서도 성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사회화 요인의 두 번째 변인은 연령이다.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건강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 변화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Oorschot, 1999; 이아름, 2010: 33에서 재인용).

김신영(2010)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에 대해 친화적임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는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약화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 복지의 실제적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아름(2010)의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 연령, 교육 등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연령만이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 복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복지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간의 복지의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리고 류진석(2004)의 연구에서도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더 친 복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조사한 이중섭(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의 교육은 사회적 가치관을 새롭게 학습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 복지적인 의식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교육 수준은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복지의식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게 되어 결국 교육을 오래 받을수록 개인 노력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당연히 여김으로써 반복지적인 의식을 키우게 될 수 있다(이아름, 2010: 35).

류만희와 최영(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복지의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ang과 Barrett(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김신영(2010), 이중섭(2009), 이아름(2010), 그리고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화론이 한국 사회에서는 유효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이중섭, 2009).

지역사회 거주기간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변인으로 이성록(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주민자치활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2) 자기이해 요인

이중섭(2009)에 따르면 복지의식을 설명하는 영향요인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강한 것은 '자기이해(self-interest) 이론이다. Pettersen(2001)에 의해 수요이론(demand theory)이라고도 불리는 자기이해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분배의 원칙에 대한 개인의 지지 여부는 계층구조상의 자신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자기이해 이론'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복지 원칙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이중섭, 2009: 77-78에서 재인용). 자기이해 요인은 구체적으로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 생활수준 등이다. 그 중 소득은 개인이 사회에서 보

다 나은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요인으로서,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질수록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Haswenfeld and Rafferty, 1989; Luo, 1998; Andres and Heien, 1999; Oorschot, 1999; Pettersen, 2001; Delaney and O'Toole, 2008; 이아름, 2010: 34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높을 경우 복지제도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특히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세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고소득자는 자신이 받는 불이익과 부담에 기반을 두고 복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이아름, 2010: 34에서 재인용).

김신영(2010)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지에 친화적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공적인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제 상태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연구한 이아름(2010)의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이해 요인 중의 하나인 혼인상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신영(2010)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즉, 기혼 또는 동거집단이 미혼 집단에 비해 친 복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을 통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구성이 공적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3) 가치관 요인

자기이해의 관점이나 사회화론이 복지의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들이 복지의식을 완벽하게 설명하

지 못함에 따라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가치관 요인이다.

가치관 요인을 선행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Kluegel과 Mateju(1995)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니는 평등주의와 반 평등주의가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통합적이고 이타주의적이며 평등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큼을 의미한다(이중섭, 2009: 78).

Andress와 Heien(1999)은 가치관 중에서도 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한 판단이 복지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의견은 1차적인 소득의 분배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배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것으로 보았다. Hasenfeld와 Rafferty(1989)는 평등한 기회에 대한 민주적 가치관, 경제적 보장, 사회 불공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지지와 같은 주요한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 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이아름, 2010: 43에서 재인용).

이중섭은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증세 필요’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을수록 집합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고나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중섭(2000)의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들여다보면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가치관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보다는 분배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증세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에 동의정도가 클수록 복지에 대해 더 지지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아름(2010)의 연구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한다’와 같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반복지적인 의식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이 지닌 이타적인 가치관은 복지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이성록, 2002; 장덕기, 2002; 구혜영, 2009: 141-142에서 재인용) 이타적인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 의식이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이념 또는 가치관을 가질수록 복지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이들이 지닌 복지의식과 그 영향 요인을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고양시 서구 중에서 6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고양시 서구 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총 163명 중 12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률은 75.5%이었다.

제 2 절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복지의식을 측정하는 부분과 복지의식 영향요인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1. 복지의식

복지의식은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3-1> 참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복지 대상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 빈곤한 사람, 실업자, 한 부모,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 대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대상 7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상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영역은 주민환경개선, 취미 교양 교육, 문화 여가사업, 빈곤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 및 자활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지원,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등이다. 따라서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6개 복지사업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표 3-1 > 복지의식

종속변인	변인	측정방법
복지 대상	아동 및 청소년, 빈곤한 사람, 실업자, 한 부모,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복지 대상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복지 영역	주민환경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지원, 빈곤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 및 자활사업, 문화 여가사업, 취미 교양 교육,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복지 책임	국가, 시, 구, 지역주민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지역 복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를 책임 주체별로 5점 척도로 측정함

복지 책임은 지역복지의 책임주체로서 국가, 시, 구, 지역주민이 지역 복지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2.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3-2> 참조). 사회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출생한 년 월을 조사하여 만나이로 환산하였고, 성별은 남, 여의 명명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을 받은 연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거주기간은 지역에 거주한 연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자기이해 요인은 직업, 혼인상태, 가구구성, 경제수준의 네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전업주부, 무직, 은퇴 등으로 조사한 후 직업이 있는 사람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 별거, 이혼, 사별, 미혼 등의 명명척도로 측정한 후 배우자 유무로 다시 구분하였다.

가구구성은 자녀수를 물어보아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고, 동거가족은 현재 동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답하도록 한 후 1세대, 2세대, 3세대 가구로 조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제수준은 가구 총수입과 주관적인 경제 상태로 측정하였다. 가구총수입은 월 평균 수입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1점으로 매우 어렵다 에서 5점 매우여유가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치관 요인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을 위한 증세, 복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저하, 사회복지 혜택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정도를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표 3-2 >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 변인	변인		측정방법
사회화 요인	연령		출생 년 월을 조사하여 만나이로 환산
	성별		남, 여의 명명척도로 측정
	교육수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연수를 연속변수로 측정
	거주기간		지역의 거주한 연수를 연속변수로 측정
자기 이해 요인	직업		명명척도로 측정한 후 직업 유무로 재구분
	혼인상태		명명척도로 측정한 후 배우자 유무로 재구분
	가 구 구 성	자녀수	자녀수를 연속 변수로 측정
		동거가족	동거 가족을 명명척도로 측정한 후 1세대, 2세대, 3세대 가구로 재구분.
	경 제 수 준	가구 총수입	월 평균 수입을 연속변수로 측정
		주관적인 경제상태	5점 척도로 측정
가치관 요인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경제성장을 위한 증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복지확대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사회복지혜택을 위한 증세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제 3 절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중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요인과 복지의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복지 대상, 복지 영역, 복지 책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표 4-1> 참조).

1. 사회화 요인

조사대상자의 사회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64세가 96명(78.0%)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15명, 12.2%), 39세 이하(12명, 9.8%)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명(53.7%), 여성이 57명(46.3%)이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75명(61.0%),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명(39.0%)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1년 이상 19년 이하 동안 거주한 사람이 41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하(35명, 28.5%), 6년 이상 10년 이하(28명, 22.8%), 20년 이상(19명,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화 요인의 분포는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형기(2011)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자기이해 요인

조사대상자의 자기이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자 123명 중 71명으로 57.7%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은 52명(42.3%)이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42.3%로 비교적 높은 것은 가정주부와 은퇴한 고령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요인	구 분		빈도	퍼센트
사회화 요인	연령	39세 이하	12	9.8
		40-64세	96	78.0
		65세 이상	15	12.2
	성별	남성	66	53.7
		여성	57	46.3
	교육수준	고졸이하	48	39.0
		전문대졸이상	75	61.0
	거주기간	5년 이하	35	28.5
		6-10년	28	22.8
		11-19년	41	33.3
20년 이상		19	15.4	
자기이해 요인	직업	무	52	42.3
		유	71	57.7
	결혼여부	배우자 있음	99	80.5
		배우자 없음	24	19.5
	자녀수	없음	22	17.9
		1-2명	80	65.0
		3명이상	21	17.1
	동거가족	1세대	23	18.7
		2세대	83	67.5
		3세대	17	13.8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44	35.5
		251-400만 원	45	37.2
		401 만 원 이상	33	27.3
주관적 경제상태	하	29	23.6	
	중	80	65.0	
	상	14	11.4	
합계			123	100.0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99명(80.5%)이었으며, 이혼, 사별 또는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24명(19.5%)이었다. 자녀수는 1-2명이 65.0%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22명, 17.9%), 3명 이상(21명, 17.1%)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2세대가 83명(67.5%)로 가장 많았고, 1세대(23명, 18.7%), 3세대(17명,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려주는 월 소득을 살펴보면 251-400만원이 45명(37.2%)로 가장 많았으며, 250만 원 이하(44명, 35.5%), 401만 원 이상(33명, 2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중이 80명(65.0%)로 가장 많았으며, 하(29명, 23.6%), 상(14명,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요인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요인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경제발전을 위해 증세, 복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 성장보다는 분배 중요, 사회복지 위한 증세 등의 5개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로 살펴보았다(<표 4-2> 참조).

5개 문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이었으며 평균 3.77점으로 동의한다 수준에 가까웠다. 그 다음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3.37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3.20점),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2.96점)의 순이었다. 5개 문항 중 가장 낮은 것은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으며, 평균 2.81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가치관은 평등주의와 집합주의적인 성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가치관 요인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123	3.77	1.00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	123	3.37	1.05
	경제성장을 위한 증세	123	3.20	1.12
	복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123	2.81	1.08
	사회복지혜택을 위한 증세	123	2.96	1.10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복지의식

1.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은 아동 및 청소년, 빈곤한 사람, 실업자,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등의 7개 대상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표 4-3>참조).

분석 결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4.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평균 3.73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4.25점), 장애인(4.23점), 그리고 빈곤한 사람(4.11점)의 4개 대상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중요한 편이다’ 이상으로 답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노인,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가 중요함을 보고한 이성균(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식이 낮고, 최근 강조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복지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복지 대상	아동 및 청소년	123	4.32	.79
	빈곤한 사람	123	4.11	.72
	실업자	123	3.73	.91
	한 부모 가정	123	3.89	.77
	다문화 가정	123	3.73	.82
	장애인	123	4.23	.80
	노인	123	4.25	.77
복지 영역	주민 환경 개선	123	3.80	.81
	취미 및 교양 교육	123	3.72	.81
	문화 여가	123	3.58	.80
	고용 및 자활사업	123	4.17	.77
	사회적 약자의 생활지원	123	4.36	.67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123	4.11	.79
복지 책임	국가	123	4.50	.63
	고양시	123	4.31	.70
	구	123	3.95	.90
	지역 주민	123	3.67	1.13

2.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주민환경개선, 취미 및 교양 교육, 문화여가, 빈곤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 및 자활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지원,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등의 6개의 복지 영역 각각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표 4-3>참조).

분석결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지원이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및 자활사업,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주민환경 개선, 취미 및 교양 교육, 문화 여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지원과 고용 및 자활사업(4.17점), 그리고 방과 후 교육 및 보호(4.11점)의 3개 영역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중요한 편이다’ 이상으로 답하고 있어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알 수 있었다.

3.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복지 책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고양시, 구, 지역주민 등에 대한 복지 책임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표 4-3>참조).

지역사회복지의 복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국가가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져야 한단데 동의하는 정도가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양시(4.31점), 구(3.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의 책임주체로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은 3.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복지 책임 주체를 여전히 중앙정부로 인식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사회화, 자기이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

1. 사회화, 자기이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

1)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4 참조>), 연령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F=6.648$, $p<0.01$), 한 부모 가정($F=11.959$, $p<0.001$), 다문화 가정($F=7.358$, $p<0.01$)을 복지대상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0세 이하 집단은 아동 및 청소년,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64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7개 복지 대상 중 아동 및 청소년($t=-2.938$,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빈곤한 사람($F=3.700$, $p<0.05$)과 장애인($F=4.368$, $p<0.01$)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11-19년 거주한 집단이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화 요인 중 성별에 따른 7개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5>과 <표 4-6> 참조), 자녀수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 부모 가정($F=3.456$, $p<0.05$)과 다문화 가정($F=3.143$,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한 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 대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족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실업자($F=4.276$, $p<0.05$)와 다문화 가정($F=4.112$,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업자는 3세대가 사는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다문화 가정은 2세대 핵가족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런데 직업, 배우자 유무, 월수입과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3)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7> 참조), ‘소득격차 정부책임’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문화 가정($t=-3.749$, $p<0.001$)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격차가 정부 책임이라는데 동의하는 집단이 다문화 가정을 복지대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증세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t=-2.471$, $p<0.05$)과 노인($t=-3.148$, $p<0.01$)에 대한 중요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장보다 분배 중요’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복지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아동 및 청소년($t=-2.062$, $p<0.05$)과 실업자($t=-2.74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장보다 분배 중요에 동의하는 집단에서 아동 및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실업자($t=-2.583$, $p<0.05$)와 다문화 가정($t=-3.16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집단에서 실업자와 다문화 가정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중에서 ‘복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저하’는 복지 대상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4>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대상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				
	남	여	t	40세 이하	40-64세	64세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t	5년 이하	6-10년 이하	11-19년	20년 이상	F
아동 및 청소년	4.30 (.78)	4.33 (.80)	-.211	4.58 (.51)	4.39 (.74)	3.67 (.97)	6.648 **	4.06 (.86)	4.48 (.70)	-2.938 **	4.37 (.59)	4.50 (.74)	4.07 (.98)	4.47 (.61)	2.153
빈곤한 사람	4.14 (.78)	4.09 (.66)	.369	4.33 (.65)	4.13 (.68)	3.87 (.99)	1.437	4.13 (.76)	4.11 (.70)	.136	4.17 (.61)	4.29 (.76)	3.83 (.77)	4.37 (.59)	3.700 *
실업자	3.77 (.97)	3.68 (.84)	.533	3.33 (.88)	3.81 (.88)	3.53 (1.06)	1.891	3.79 (.84)	3.69 (.95)	.580	3.77 (.73)	3.71 (.89)	3.68 (1.08)	3.79 (.91)	.087
한 부모가정	3.88 (.86)	3.91 (.66)	-.238	4.42 (.79)	3.95 (.68)	3.13 (.83)	11.959 ***	3.90 (.69)	3.89 (.83)	.017	4.00 (.68)	3.82 (.81)	3.76 (.86)	4.11 (.65)	1.204
다문화 가정	3.76 (.78)	3.70 (.86)	.375	3.50 (.79)	3.86 (.73)	3.07 (1.03)	7.358 **	3.73 (.81)	3.73 (.82)	-.027	3.80 (.71)	3.79 (.83)	3.56 (.92)	3.89 (.73)	.962
장애인	4.33 (.88)	4.11 (.69)	1.571	4.33 (.77)	4.24 (.75)	4.07 (1.16)	.407	4.23 (.83)	4.23 (.79)	.017	4.37 (.64)	4.36 (.82)	3.88 (.84)	4.53 (.77)	4.368 **
노인	4.32 (.74)	4.18 (.80)	1.019	4.42 (.79)	4.20 (.79)	4.47 (.64)	1.083	4.33 (.69)	4.20 (.82)	.931	4.23 (.80)	4.50 (.57)	4.07 (.81)	4.32 (.82)	1.772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5>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1

복지 대상	직업			배우자유무			자녀수			
	무	유	t	있음	없음	t	없음	1-2명	3명	F
아동 및 청소년	4.29 (.84)	4.34 (.75)	-.341	4.31 (.84)	4.33 (.56)	-.112	4.36 (.58)	4.31 (.83)	4.29 (.84)	.055
빈곤한 사람	4.13 (.71)	4.10 (.74)	.271	4.12 (.74)	4.08 (.65)	.228	4.14 (.64)	4.08 (.74)	4.24 (.76)	.428
실업자	3.67 (.90)	3.77 (.92)	-.607	3.77 (.96)	3.58 (.65)	.885	3.55 (.73)	3.79 (.92)	3.71 (1.05)	.604
한 부모가정	3.75 (.78)	4.00 (.75)	-1.779	3.84 (.81)	4.13 (.53)	-1.633	4.18 (.58)	3.90 (.73)	3.57 (.97)	3.456 *
다문화 가정	3.63 (.88)	3.80 (.76)	-1.124	3.70 (.85)	3.88 (.68)	-.953	3.86 (.71)	3.80 (.77)	3.33 (1.01)	3.143 *
장애인	4.25 (.76)	4.21 (.84)	.262	4.17 (.85)	4.46 (.50)	-1.569	4.45 (.51)	4.11 (.87)	4.43 (.74)	2.383
노인	4.37 (.68)	4.17 (.82)	1.394	4.25 (.82)	4.25 (.53)	.014	4.32 (.56)	4.21 (.80)	4.33 (.85)	.297

* : $p < .05$

<표 4-6>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2

복지 대상	동거가족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1세대	2세대	3세대	F	250만 원 이하	215-4 00만 원	401만 원 이상	F	하	중	상	F
아동 및 청소년	3.96 (.87)	4.40 (.76)	4.41 (.71)	3.027	4.14 (.94)	4.40 (.75)	4.42 (.61)	1.628	4.34 (.55)	4.28 (.81)	4.50 (1.09)	.499
빈곤한 사람	4.04 (.87)	4.06 (.68)	4.47 (.62)	2.439	4.07 (.82)	4.18 (.68)	4.06 (.65)	.332	4.24 (.57)	4.11 (.77)	3.86 (.66)	1.328
실업자	3.26 (1.05)	3.81 (.86)	4.00 (.79)	4.276 *	3.72 (.93)	3.64 (.95)	3.91 (.84)	.810	3.97 (.86)	3.69 (.97)	3.50 (.51)	1.501
한 부모 가정	3.65 (.93)	3.98 (.73)	3.82 (.72)	1.664	3.65 (.81)	4.00 (.76)	4.00 (.66)	2.937	4.00 (.65)	3.83 (.85)	4.07 (.47)	.950
다문화 가정	3.35 (.98)	3.87 (.77)	3.59 (.61)	4.112 *	3.63 (.90)	3.80 (.84)	3.82 (.68)	.664	3.93 (.70)	3.61 (.87)	4.00 (.55)	2.509
장애인	4.09 (.94)	4.25 (.79)	4.29 (.68)	.443	4.09 (1.08)	4.33 (.56)	4.21 (.65)	.971	4.48 (.50)	4.15 (.91)	4.14 (.53)	1.921
노인	4.30 (.63)	4.28 (.83)	4.06 (.65)	.621	4.21 (.83)	4.33 (.70)	4.15 (.79)	.571	4.31 (.66)	4.28 (.84)	4.00 (.55)	.857

* : $p < .05$

<표 4-7>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대상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대상	소득격차 정부책임			경제성장 위해 증세			복지확대 근로의욕저하			성장보다 분배 중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안 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아동 및 청소년	4.14 (1.03)	4.41 (.61)	-1.839	4.17 (.87)	4.52 (.61)	-2.471 *	4.36 (.83)	4.22 (.68)	.853	4.19 (.87)	4.48 (.63)	-2.062 *	4.29 (.80)	4.39 (.76)	-.645
빈곤한 사람	4.02 (.77)	4.16 (.70)	-1.014	4.07 (.79)	4.17 (.61)	-.773	4.11 (.75)	4.11 (.66)	.027	4.06 (.72)	4.19 (.72)	-.963	4.03 (.67)	4.31 (.82)	-1.903
실업자	3.56 (1.03)	3.83 (.83)	-1.551	3.68 (.93)	3.81 (.88)	-.787	3.71 (.95)	3.78 (.83)	-.358	3.54 (.90)	3.98 (.87)	-2.749 **	3.60 (.89)	4.06 (.89)	-2.583 *
한 부모가 정	3.77 (.94)	3.96 (.66)	-1.332	3.80 (.82)	4.02 (.70)	-1.535	3.90 (.80)	3.89 (.70)	.050	3.86 (.82)	3.94 (.71)	-.632	3.85 (.77)	4.00 (.79)	-.970
다문화 가정	3.37 (.84)	3.93 (.74)	-3.749 ***	3.66 (.81)	3.83 (.83)	-1.102	3.72 (.84)	3.75 (.77)	-.158	3.64 (.82)	3.85 (.81)	-1.443	3.59 (.81)	4.08 (.73)	-3.168 **
장애인	4.07 (.93)	4.31 (.72)	-1.599	4.21 (.90)	4.25 (.65)	-.262	4.23 (.81)	4.22 (.79)	.048	4.17 (.78)	4.30 (.83)	-.833	4.14 (.80)	4.44 (.77)	-1.936
노인	4.21 (.83)	4.28 (.74)	-.447	4.07 (.85)	4.50 (.57)	-3.148 **	4.32 (.75)	4.08 (.80)	1.563	4.26 (.70)	4.24 (.86)	.142	4.22 (.75)	4.33 (.82)	-.748

* : p<.05, ** : p<.01, *** : p<.001

2. 사회화, 자기이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1)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8> 참조), 성별에서는 주민환경개선($t=-2.146$, $p<0.05$), 취미교양교육($t=-2.073$, $p<0.05$)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주민환경개선과 취미교양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고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복지영역에 대한 인식차이는 방과 후 교육($F=6.789$,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0세 이하 집단에서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 발달주기상 학령기 아동을 둔 30대와 40대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취미교양교육($t=-2.150$, $p<0.05$)과 방과 후 교육($t=-2.247$,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고졸 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취미교양교육,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고학력자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주기간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주민환경개선($F=4.145$,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11-19년인 집단에서 주민환경개선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감이 강하게 형성될 정도로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이 지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9>과 <표 4-10> 참조), 배우자 유무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주민환경개선($t=2.294$, $p<0.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주민환경개선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자녀수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방과 후 교육($F=3.439$, $p<0.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1명인 집단에서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과 방과 후 시간의 보호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가족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고용자활($F=4.560$, $p<0.05$)과 방과 후 교육($F=3.300$,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세대 가구 집단에서 고용자활과 방과 후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월수입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방과 후 교육($F=6.075$,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월수입이 많은 집단에서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11> 참조), ‘소득격차가 정부 책임’ 가치관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증세’에 대한 가치관은 취미교양교육($t=-2.955$, $p<0.01$), 문화여가($t=-3.320$, $p<0.01$), 생활지원($t=-2.013$, $p<0.05$) 등의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증세에 동의하는 집단에서 취미교양교육, 문화여가, 생활지원을 더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증가 근로의욕 저하’에 대한 가치관은 주민환경개선($t=-2.037$,

p<0.05)에 대한 인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복지증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에 대해 동의하는 집단에서 주미환경개선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가치관은 복지영역 중 생활지원($t=-2.107$, $p<0.05$)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 증가를 동의하는 집단에서 생활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성장보다 분배 중요’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8>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영역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				
	남	여	t	40세 이하	40-64 세	64세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대 졸이상	t	5년 이하	6-10년 이하	11-19 년	20년 이상	F
주민 환경 개선	3.65 (.83)	3.96 (.77)	-2.146 *	3.50 (.79)	3.79 (.83)	4.07 (.70)	1.619	3.63 (.81)	3.91 (.80)	-1.879	3.46 (.85)	3.79 (.83)	4.10 (.73)	3.79 (.71)	4.145 **
취미 교양 교육	3.58 (.91)	3.88 (.65)	-2.073 *	3.75 (.62)	3.76 (.81)	3.40 (.91)	1.286	3.52 (.87)	3.84 (.75)	-2.150 *	3.46 (.91)	3.89 (.91)	3.85 (.65)	3.63 (.68)	2.132
문화 여가	3.47 (.82)	3.70 (.75)	-1.615	3.42 (.51)	3.63 (.81)	3.40 (.91)	.779	3.50 (.94)	3.63 (.69)	-.856	3.34 (.83)	3.64 (.87)	3.80 (.64)	3.42 (.83)	2.503
고용 자활	4.18 (.80)	4.16 (.75)	.170	4.08 (.90)	4.22 (.71)	3.93 (1.03)	.962	4.10 (.80)	4.21 (.75)	-.760	4.14 (.77)	4.25 (.88)	4.15 (.79)	4.16 (.60)	.125
생활 지원	4.35 (.73)	4.37 (.61)	-.162	4.42 (.51)	4.39 (.67)	4.13 (.83)	.943	4.40 (.70)	4.33 (.66)	.496	4.40 (.60)	4.54 (.69)	4.17 (.66)	4.42 (.76)	1.813
방과 후 교육	4.03 (.87)	4.21 (.67)	-1.263	4.42 (.51)	4.18 (.75)	3.47 (.91)	6.789 **	3.92 (.89)	4.24 (.69)	-2.247 *	4.29 (.57)	4.21 (.87)	3.98 (.72)	3.95 (1.07)	1.412

* : p<.05, ** : p<.01

<표 4-9>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1

복지 영역	직업			배우자유무			자녀수			
	무	유	t	있음	없음	t	없음	1-2명	3명	F
주민환경개선	3.96 (.74)	3.68 (.85)	1.930	3.88 (.81)	3.46 (.77)	2.294 *	3.50 (.74)	3.85 (.87)	3.90 (.62)	1.818
취미교양교육	3.77 (.75)	3.68 (.85)	.625	3.76 (.83)	3.54 (.72)	1.166	3.68 (.64)	3.74 (.86)	3.67 (.79)	.084
문화여가	3.63 (.71)	3.54 (.85)	.680	3.61 (.81)	3.46 (.72)	.811	3.55 (.67)	3.63 (.80)	3.43 (.92)	.519
고용자활	4.12 (.83)	4.21 (.73)	-.676	4.17 (.78)	4.17 (.76)	.028	4.32 (.64)	4.20 (.78)	3.90 (.83)	1.708
생활지원	4.31 (.72)	4.39 (.64)	-.698	4.34 (.70)	4.42 (.58)	-.472	4.36 (.49)	4.38 (.70)	4.29 (.78)	.143
방과 후 교육	4.06 (.75)	4.15 (.82)	-.672	4.13 (.82)	4.04 (.62)	.496	4.14 (.56)	4.21 (.75)	3.71 (1.00)	3.439*

* : $p < .05$

<표 4-10>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2

복지 영역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동거가족			
	250만 원 이하	215-400 만원	401만 원 이상	F	하	중	상	F	1 세대	2 세대	3 세대	F
주민환경개선	3.65 (.89)	3.96 (.82)	3.79 (.69)	1.524	3.69 (.93)	3.83 (.77)	3.86 (.86)	.330	3.70 (.70)	3.83 (.85)	3.76 (.83)	.259
취미교양교육	3.53 (.85)	3.76 (.83)	3.88 (.69)	1.813	3.66 (.85)	3.68 (.77)	4.07 (.91)	1.526	3.70 (.87)	3.77 (.83)	3.47 (.62)	.967
문화여가	3.42 (.90)	3.62 (.77)	3.76 (.66)	1.756	3.55 (.87)	3.59 (.77)	3.57 (.85)	.021	3.52 (.84)	3.61 (.82)	3.47 (.62)	.293
고용자활	4.14 (.80)	4.20 (.84)	4.15 (.66)	.072	4.31 (.71)	4.16 (.81)	3.93 (.61)	1.159	3.87 (.86)	4.31 (.73)	3.88 (.69)	4.560 *
생활지원	4.30 (.77)	4.38 (.65)	4.36 (.60)	.147	4.41 (.56)	4.34 (.71)	4.36 (.74)	.132	4.22 (.67)	4.40 (.68)	4.35 (.70)	.631
방과 후 교육	3.79 (.94)	4.27 (.65)	4.33 (.64)	6.075 **	4.17 (.80)	4.06 (.78)	4.29 (.82)	.574	3.74 (.91)	4.20 (.74)	4.18 (.72)	3.300 *

** : $p < .01$

<표4-11>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영역	소득격차 정부책임			경제성장 위해 증세			복지확대 근로욕 저하			성장보다 분배 중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주민환경 개선	3.84 (.81)	3.78 (.82)	.400	3.68 (.89)	3.96 (.68)	-1.930	3.70 (.86)	4.03 (.65)	-2.037 *	3.77 (.80)	3.83 (.84)	-.437	3.82 (.77)	3.75 (.93)	.406
취미 교양교육	3.58 (.79)	3.79 (.82)	-1.342	3.54 (.84)	3.96 (.71)	-2.955 **	3.70 (.80)	3.75 (.84)	-.301	3.75 (.75)	3.67 (.89)	.586	3.76 (.79)	3.61 (.87)	.913
문화여가	3.44 (.66)	3.65 (.85)	-1.382	3.38 (.74)	3.85 (.80)	-3.320 **	3.56 (.77)	3.61 (.87)	-.301	3.59 (.71)	3.56 (.90)	.265	3.57 (.77)	3.58 (.87)	-.054
고용자활	4.07 (.85)	4.22 (.72)	-1.059	4.07 (.81)	4.31 (.70)	-1.688	4.18 (.70)	4.14 (.93)	.292	4.13 (.70)	4.22 (.86)	-.650	4.14 (.76)	4.25 (.80)	-.728
생활지원	4.26 (.72)	4.41 (.65)	-1.223	4.25 (.73)	4.50 (.57)	-2.013 *	4.41 (.65)	4.22 (.72)	1.430	4.26 (.67)	4.48 (.66)	-1.804	4.28 (.65)	4.56 (.69)	-2.107 *
방과 후 교육	4.00 (.81)	4.18 (.77)	-1.171	4.00 (.77)	4.27 (.79)	-1.883	4.18 (.74)	3.94 (.89)	1.535	4.10 (.73)	4.13 (.87)	-.195	4.10 (.79)	4.14 (.79)	-.225

* : $p < .05$, ** : $p < .01$

3. 사회화, 자기이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1)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12> 참조), 성별에서는 복지 책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중 국가($F=4.973$, $p<0.01$)와 고양시($F=3.646$, $p<0.05$)가 지역복지의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가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에는 40세 이하 집단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양시가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40-64세 집단에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의 주체를 중앙 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대한 정체감을 대변하는 거주기간에 따른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국가($F=7.434$, $p<0.001$), 고양시($F=2.728$, $p<0.05$), 구($F=2.816$, $p<0.05$)를 복지책임주체로 인식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년 이상 거주한 집단이 지역복지의 책임주체로 국가, 고양시, 구에 대한 책임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13>과 <표 4-14> 참조), 직업유무에 따른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국가($t=-2.112$, $p<0.05$)가 복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이 있는 집단이

지역복지의 책임을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유무, 자녀수, 동거가족, 월수입, 주관적 경제 상태에서는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15> 참조), ‘소득격차 정부책임’에 동의하는 집단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2.659$, $p<0.01$).

‘경제발전을 위한 증세’ 가치관에 따라 복지 책임주체가 고양시($t=-2.364$, $p<0.05$)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집단이 고양시의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장보다 분배 중요’ 가치관에 따라 복지 책임 주체가 국가($t=-2.274$, $p<0.05$)와 고양시($t=-2.183$, $p<0.05$)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장보다 분배 중요에 동의하는 집단에서 국가와 고양시의 책임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증가’에서는 국가($t=-2.856$,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세금 증가에 동의하는 집단에서 국가 책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확대 근로의욕 저하’에서는 복지 책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집합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국가가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사회화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책임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				
	남	여	t	40세 이하	40-6 4세	64세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 대졸 이상	t	5년 이하	6-10 년 이하	11-1 9년	20년 이상	F
국가	4.55 (.61)	4.46 (.65)	.780	4.75 (.45)	4.54 (.61)	4.07 (.70)	4.973 **	4.42 (.71)	4.56 (.57)	-1.22 9	4.49 (.65)	4.79 (.41)	4.20 (.67)	4.79 (.41)	7.434 ***
고양 시	4.27 (.71)	4.35 (.69)	-.61 3	4.08 (.79)	4.40 (.60)	3.93 (1.03)	3.646 *	4.25 (.72)	4.35 (.68)	-.743	4.11 (.58)	4.43 (.83)	4.24 (.73)	4.63 (.49)	2.728 *
구	4.02 (.95)	3.88 (.84)	.843	3.67 (.88)	4.02 (.90)	3.73 (.88)	1.322	3.85 (.82)	4.01 (.95)	-.952	3.77 (.97)	4.07 (.97)	3.80 (.81)	4.42 (.69)	2.816 *
지역 주민	3.74 (1.16)	3.60 (1.10)	.710	3.58 (.90)	3.74 (1.13)	3.33 (1.29)	.873	3.71 (1.18)	3.65 (1.10)	.261	3.83 (1.09)	3.50 (1.29)	3.49 (1.09)	4.05 (.97)	1.53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13>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1

복지 책임	직업			배우자유무			자녀수			
	무	유	t	있음	없음	t	없음	1-2명	3명	F
국가	4.37 (.68)	4.61 (.57)	-2.112 *	4.53 (.61)	4.42 (.71)	.754	4.36 (.65)	4.58 (.59)	4.38 (.74)	1.456
고양시	4.31 (.80)	4.31 (.62)	-.017	4.32 (.74)	4.25 (.53)	.456	4.18 (.58)	4.36 (.69)	4.24 (.83)	.695
구	3.96 (.76)	3.94 (.99)	.108	4.00 (.89)	3.75 (.94)	1.218	3.68 (.89)	4.06 (.87)	3.81 (.98)	1.867
지역주 민	3.67 (1.09)	3.68 (1.16)	-.014	3.62 (1.13)	3.92 (1.13)	-1.166	3.82 (1.22)	3.64 (1.11)	3.67 (1.15)	.217

* : $p < .05$

<표 4-14> 자기이해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2

복지 책임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동거가족			
	250만 원 이하	215-400 만원	401만 원 이상	F	하	중	상	F	1세대	2세대	3세대	F
국가	4.51 (.63)	4.42 (.69)	4.61 (.55)	.802	4.59 (.56)	4.47 (.63)	4.50 (.76)	.326	4.30 (.70)	4.59 (.56)	4.35 (.78)	2.465
고양시	4.23 (.78)	4.27 (.75)	4.45 (.50)	1.036	4.24 (.68)	4.33 (.70)	4.36 (.74)	.185	4.13 (.92)	4.37 (.61)	4.24 (.75)	1.189
구	4.09 (.86)	3.87 (.94)	3.88 (.89)	.833	3.83 (.80)	4.00 (.91)	3.93 (1.07)	.388	3.78 (.90)	4.04 (.89)	3.76 (.97)	1.130
지역주민	3.53 (1.16)	3.71 (1.16)	3.79 (1.08)	.507	3.52 (.98)	3.69 (1.16)	3.93 (1.26)	.631	3.26 (1.21)	3.78 (1.12)	3.71 (.98)	1.946

* : $p < .05$

<표 4-15> 가치관 요인에 따른 복지 책임에 대한 차이 분석

복지 책임	소득격차 정부책임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			복지확대 근로소득 저하			성장보다 분배 중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동의 안함	동의	t
국가	4.30 (.74)	4.61 (.53)	-2.659 **	4.44 (.67)	4.60 (.56)	-1.388	4.54 (.60)	4.42 (.69)	.986	4.39 (.69)	4.65 (.52)	-2.274 *	4.40 (.65)	4.75 (.50)	-2.856 **
고양 시	4.16 (.81)	4.39 (.62)	-1.704	4.18 (.74)	4.48 (.61)	-2.364 *	4.30 (.68)	4.33 (.75)	-.247	4.19 (.67)	4.46 (.71)	-2.183 *	4.24 (.73)	4.47 (.60)	-1.670
구	3.81 (.82)	4.03 (.94)	-1.237	3.89 (.94)	4.04 (.83)	-.915	3.97 (.93)	3.92 (.84)	.272	3.83 (.76)	4.11 (1.04)	-1.750	3.95 (.83)	3.94 (1.06)	.053
지역 주민	3.49 (1.12)	3.78 (1.13)	-1.341	3.61 (1.20)	3.77 (1.04)	-.789	3.64 (1.20)	3.75 (.96)	-.471	3.59 (1.08)	3.78 (1.19)	-.890	3.76 (1.08)	3.47 (1.23)	1.277

* : p<.05, ** : p<.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1. 결과요약

본 연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을 살펴보고 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고양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의식과 그 영향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은 7개 복지 대상 중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빈곤한 사람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별로 사회화, 자기이해, 가치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19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지 대상으로 더 중요한 인식하고 있었다.

실업자에 대해서는 3세대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지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지 대상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은 40대 이상 64세 이하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2세대 가구, 그리고 소득격차가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19년 이하 거주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지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화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을 복지 대상으로서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거주기간이 11년 이상 20년 미만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에 대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자기이해 요인 중에서는 자녀수 및 가구구성에 따라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 부모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3세대 가구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빈곤한 사람과 한 부모 가정을 복지 대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큰 사람일수록 실업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지원, 고용 및 자활사업, 방과 후 교육 및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 영역으로써 주민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1년 이상 19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복지 확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취미교양교육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높았다.

문화여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자활에 대해서는 2세대 가정이 복지 대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는 40대 이하, 즉 나이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거나 한 두 명인 사람이, 2세대 가정인, 월수입이 많을수록, 복지 영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화 요인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민환경개선과 취미 교양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미교양교육과 방과 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기이해 요인 중에서는 자녀수가 적고 핵가족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방과 후 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증세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취미교양교육, 문화여가,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구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책임주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 책임으로써 국가의 중요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소득 격차는 정부의 책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지 책임으로써 국가 즉, 중앙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집단이,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지 책임 주체로서 고양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가 지역복지에 대해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복지 책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고 이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복지의 책임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 구,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센터의 확대를 통해 가졌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직까지 지역복지의 책임 주체로 국가 즉, 중앙정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자치구 단위별로 실행하고는 있지만, 지역복지를 위한 예산은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큼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분권과 지역복지 간의 관계,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중앙정부, 시·군·구 및 지역주민의 역할과 부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2. 논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가치관 요인에 따라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복지 대상과 복지 영역의 선정, 그리고 복지실행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표갑수와 조보행(2009)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가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석주(2004)는 군포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중 약 45%가 동사무소 동장의 추천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동장과의 사적 인연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이 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대표자나 전문가, 또는 개혁 성향의 젊은 층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초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군포시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지역시민단체 대표자, 주민자치조직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성, 연령, 학력, 거주기간, 자녀수 및 가구구성, 그리고 거주기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을 골고루 구성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등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여 주민자치위원에 위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제대로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닐 수 있으며,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순수한 주민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방향으로 지역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언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복지의식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복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지역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고양시 서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실시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특성을 지닌 주민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복지의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을 복지 대상, 복지 영역, 복지 책임 주체로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서 복지의식을 협의로 다루어 광의의 복지의

식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는 제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의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김영모(1986). 『한국 사회복지의 제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필두 외.(1999).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대식·정명채·최경환·채해운(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층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신원식(2003).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서울: 삼우사.

이성우 외 공저(2007).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_____(2008).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서울:조명문화사.

최일섭(198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행정자치부(2002).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행정자치부.

(일반논문)

구혜영(2008). 「주민자치위원 활동동인 특성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권 3호, 한국비영리학회, pp.129-159.

김신영(2008). 「한국청소년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후복지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9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pp.23-42.

_____(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11권 1호, pp.87-105.

- 김영순·여유진(2008). 「한국인의 복지태도: 탈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2007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77-306.
- 김희진·전희정(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권 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95-121.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 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권 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191-201.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권 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79-101.
- 박희봉·이희창(2005).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행정연구』, 14권 4호, 한국행정연구원, pp.3-38.
- 박희선(2000)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기능」, 『주민자치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pp.47-50.
-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319-344.
-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0). 「경제위기시대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관점에 대한 소개」,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3-11.
- 안상훈(2000). 「복지정책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193-221.
- 안치민(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권, 고려사회학연구회, pp.211-228.
-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

- 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51권, pp.229-256.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 책임 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권 2호, 한국사회학회, pp.205-228.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권, 4호, pp.73-79.
- 조석주(2004).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분석과 시사점 군포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8권 1호(통권 56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77-110.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203-225.
- (학위논문)
- 김형기(201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아영(2008).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화(1991). 「복지행정공무원의 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복지행정직과 전문직과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록(2002).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기(2002). 「자원봉사의식과 봉사활동 및 성과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 인터넷 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검색일 2011.9.20 자료민원신청)

3. 외국문헌

(학술지 논문)

Andress, H. J. and Heien, T.(1999).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German Welfare Stat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cent Trends and Methods of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Potsdam, Germany, April 30, May 1-2.

_____.(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337-356.

Blekesaune M. & Quadagno, J.(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Delaney, L. & O'Toole, F.(2008). Preferences for Specific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Ireland, *Applied Economics Letters*, 15, 985-989.

Hasenfeld, Y., & Rafferty, J. A.(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1027-1048.

Koster, F.(2008). The European Union's Impact on Welfare State Attitudes: A Longitudinal and Multilevel, Paper Prepared for the 3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Budapest, June 26-30.

- Kulesa, p., & Eagly, A.H. 2009. The Role of Values in Determining Welfare Attitudes, Institute of policy research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its series IRP working papers with number 98-1.
- Luo, X.(1998). What Affects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Role in Solving Un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summer 1998, 10(2), 121-144.
- Oorschot, W. V.(1999). The Legitimacy of Welfare: a Sociological Analysis of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Schemes. worc-paper series 99.11.22, worc/tisser, tilburg.
- Pettersen, P. A.(2001).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7-49.
- Yang, P. Barrett, N.(2006).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95-109.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주민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치의 장으로서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원의 복지의식이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익명이고 논문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

지도교수 : 이 성 우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자 : 심 수 연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들입니다. 귀하께서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래의 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대상에 대해 모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복지 대상	매우 중요하다 5	중요한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	아동 및 청소년					
2	빈곤한 사람					
3	실업자					
4	한 부모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장애인					
7	노인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지역복지사업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래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 모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매우중 요하다 5	중요한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8	주민 환경 개선(꽃길					

	조성, 방법, 환경미화 등)					
9	취미 및 교양 교육(평생교육, 취미 및 교양 강좌 등)					
10	문화 여가(음악회, 전시회, 생활체육, 등)					
11	빈곤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 및 자활사업					
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지원(독거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13	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교육 및 보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복지 책임	매우 그렇다 5	어느 정도 그렇다 4	그저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국가 (중앙정부)					
15	고양시 (지방자치단체)					
16	구					
17	지역 주민					

※ 다음은 평소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동의한다 5	동의한다 4	그저 그렇다 3	동의하지 않는다 2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18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19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20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21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					
22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 성별: 1) 남성 () 2) 여성 ()
2. 거주 지역: () 동
3.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년

4. 연령 만 세
생년월일 1) 양력 () 2) 음력 ()
 년 월 일

5.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가?

- 1) 배우자와 동거 ()
- 2) 배우자와 별거 ()
- 3) 배우자와 이혼 ()
- 4) 배우자와 사별 ()
- 5) 미혼 ()

6.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자녀수 : 아들 () 명, 딸 () 명, 합계 ()
2) 없다()

7. 귀하와 현재 사는 분(함께 동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함께 사는 분들을 모두 O 표해 주십시오.

- 0) 혼자 독거 () 1) 배우자 ()
- 2) 어머니 () 3) 아버지 ()
- 4) 시어머니/친정어머니() 5) 시아버지/친정아버지()
- 6) 아들 () 7) 딸 ()
- 8) 며느리 () 9) 사위 ()
- 10) 손자/손녀 () 11) 형제/자매 ()
- 12) 기타 친척 () 13) 기타(구체적으로)

8. 귀하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 | |
|------------------|----------------------|
| 1) 불교() | 2) 기독교() |
| 3) 천주교() | 4) 유교() |
| 5) 천도교() | 6) 기타(구체적으로) |
| 7) 종교 없음 | |

9. 귀하는 학교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년)

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관리직 () | 2) 전문직 () |
| 3) 사무직 () | 4) 판매/서비스직 () |
| 5)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 | 6) 전업주부 () |
| 7) 무직 () | 8) 은퇴 () |
| 9) 기타(구체적 써주시기 바랍니다.) | |

11. 귀하 가구 전체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12. 귀하 가구의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어렵다 | () |
| 2) 조금 어려운 편이다 | () |
| 3) 보통이다 | () |
| 4) 여유가 있는 편이다 | () |
| 5) 매우 여유가 있다 | () |

ABSTRACT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Welfare Awareness : Focused on Community Residents Council's Counselors

Sim, Soo Yo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n order to reinforce residents' self governing center's roles and its abilities, residents council has been formed, and its still active to revitalize regional welfare. This research will focus on welfare awareness that residents council recognizes it, and to examine primary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welfare awareness. To find out its awareness, and following factors, there were surveys for 123 Goyang counselors in 2011 October 5th to 18th. The research has been progressed under two frames, welfare awareness and primary factors that effect the awareness. The two main frames were then divided into small sections such as welfare awareness for "who," "area," "its responsibility," and primary factors for "social factors," "self-interest factors," and "a personnel sense of values."

Counselors who took the survey acknowledged that our primary targets are kids, teenagers, seniors, disables, and poor living conditions. For welfare area, they acknowledged that supporting poors' living condition was primary issue and following that, employment, revitalize, and education were important. Survey appealed that the government has to take all the responsible for regional welfare issues. It is obvious that the residents council itself must take the responsible for regional welfare, but counselors still insi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responsible for weakness of their own regional welfare. Based on the research, different awareness comes from counselors' opinions on "social factors," "self-interest factors," and "a personnel sense of values." As social factors, sex, age, scholastic ability, and living condition have effected the awareness. As self-interest factors, the number of kids, family type, and their incomes have effected the awareness. To develop our economy, people have to pay more taxes, but the distribution comes before development; therefore, increase in welfare taxes influenced negatively for welfare awareness.

In conclusion, using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nd research, we have to reconsider sex, age, scholastic ability, incomes, and number of families before we form residents council and furthermore, it is urgent to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in sense of our values such as 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issues.